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제36호

TPP(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와 동아시아, 분석 및 제언

미국의 동아시아정상회담(EAS) 참여와 TPP 구상 등은 미국의 동아시아 신개입전략으로 볼 것인가? 노다 수상이 TPP에의 공식 참가가 아닌, TPP 교섭에의 참여를 표명한 것이지만, 일본 통상정책 전환의 정치적 배경과 경제적 파장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나아가 TPP를 둘러싼 미중관계를 분석하고 전망하며,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살피고 제언하고자 한다.

[1] TPP를 둘러싼 일본 국내 정치적 배경 분석 및 평가 (최희식, 국민대 <11/28>)

[2] 미국의 동아시아 신개입전략과 일본의 TPP전략 (김양희, 대구대 <11/30>)

[3] 미중 카르텔과 중국의 반TPP 정치학: “미국만큼 우리에게도!” (박홍서, 한국외대중국연구소 <12/2>)

※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이정철)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 또는 전화(02-733-3348)로 회원 등록하실 수 있으며,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과 아름다운 동행을 권합니다.

TPP를 둘러싼 일본 국내 정치적 배경 분석 및 평가

최희식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 I. TPP 추진의 정치경제적 배경: 일본판 ‘제 3의 길’ 과 TPP
- II. 노다 내각의 등장과 TPP
- III. 일본 국내정치 전망

I. TPP 추진의 정치경제적 배경: 일본판 ‘제 3의 길’ 과 TPP

1) 저성장시대, 일본경제정책의 딜레마

전후 일본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분야에 대한 ‘보조금 정치’ 를 통해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려는 균등주의적 경제정책이 기본이었다. 이러한 ‘이익 유도 정치’ 는 자민당의 포괄정당화를 위한 포석으로 안정적 장기집권의 토대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악명 높은 금권정치와 재정적자를 초래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재정 혹은 신(新)자유주의적 개혁 등 개혁주의적 경제정책이 균등주의적 경제정책의 막간에 등장하였다. 물론 개혁주의적 경제정책은 제한적이었고 균등주의적 경제정책의 높은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순환구조는 경제가 고도성장하는 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경제성장의 이익을 산업보호에 쓸 수 있었고, 개혁적 경제정책으로 그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사회가 저성장사회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경제정책의 순환구조는 기능하기 힘들게 되었다. 거품경제의 붕괴,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전, 경쟁국의 기술혁신 등으로 일본경제는 저성장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기능을 활용한 경쟁 시스템의 도입을 추구하는 개혁적 경제정책이 전면에 대두되기 시작했다. 거칠게 얘기하면, 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경제정책은 개혁주의적 경제정책이 주(主)가 되고 균등주의적 경제정책이 종(從)이 되면서 역전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저성장사회 속에서 시행된 개혁주의적 경제정책은 한정된 국가수입 구조에서 복지예산 삭감의 형태로 나타났고, 지방과 도시, 그리고 빈부의 격차를 가속화시켜 국민의 저항을 불러왔다.

반면 2009년 역사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민주당 정부는 이러한 ‘격차사회의 시정’을 핵심과제로 내걸고 복지정책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하였으나, 세수를 확대할 수 없는 저성장구조 속에서 악화될 대로 악화된 재정적자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일본경제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생겼다. 결국 민주당이 약속했던 고속도로 무료화, 가솔린세 면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 변제 유예 등은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2) 민주당의 신(新)성장전략: ‘제 3의 길’의 모색

어찌 보면, 세금의 대폭적 인상을 통해 저성장 구조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 듯하지만, 이는 곧 ‘정치적 자살’을 의미하기에 쉬운 선택지는 아니다. 결국, ‘시장과 경쟁’, ‘부의 재분배’ 모두 세금의 대폭적 인상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저성장 구조에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정부는 ‘새로운 성장 담론’을 기반으로 ‘시장과 경쟁’, ‘부의 재분배’를 통합적으로 달성하려는 ‘제 3의 길’을 전면화 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치적으로 터부시 되었던 소비세 인상 등 세제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2009년 12월, 각의 결정된 “신(新)성장전략”은 민주당이 표방하는 ‘제 3의 길’의 방향성을 읽어 낼 수 있는 중요한 문건이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에서 발표된 위 전략은 선거공약 이행 여부를 둘러싼 갈등,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 때문에 추진력을 상실하다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는 크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고용·인재’라는 타이틀 속에 보육시스템 개혁 등 저출산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 시책의 실시이다. 둘째, 신(新)성장산업으로 환경(칸코), 건강(켄코), 관광(칸코)에 역점을 두어 신(新)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는 3K 전략 및 과학기술 진흥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활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도성장 벨트에 참여하려는 적극적 FTA 전략이다. 결국, 이러한 경제전략은 대외 연계를 통해 기존 주류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신(新)성장 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본 경제를 성장시키고, 성장의 혜택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처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간 수상의 TPP에의 참여 표명은 이러한 신(新)성장전략의 핵심전략이며, 기존 경제정책과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다. 단순히 아태지역의 고도성장 벨트에 참여하여 성장을 도모한다는 전략 이외에도 기존 시스템에서 보호받고 있던 농업, 금융 등의 저경쟁력 산업을 ‘외압’의 형태로 재편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간 수상이 TPP 참여 표명과 동시에 규제개혁 등 국내 경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뜻을 밝히고 농업개혁을 위한 ‘농업 구조개혁 추진본부’를 설치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그런 의미에서 간 수상이 신(新)성장전

략과 TPP 참여를 “헤이세이(平成)의 개국”으로 칭한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토야마 내각이 수립한 신(新)성장전략에 간 수상이 TPP 참여를 추가시켰다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수상은 소비세 인상을 추가하였다. 기실 간 수상도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피력했지만, 2010년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소비세 인상 문제는 정치 공간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복구 과정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금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결국, 신(新)성장전략으로 표출된 일본판 ‘제 3의 길’은 ‘개방’과 ‘세금’이라는 양 기둥 위에 구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 노다 내각의 등장과 TPP

1) 동일본 대지진과 TPP

간 수상의 TPP 참여 발표는 국내적 대립구조를 야기하였다. 농업단체의 집단적 반발, 심지어 민주당 내 반발에 직면하여, 간 수상은 TPP 참여 여부에 대한 명시적 답변을 회피할 정도였다. 더욱이 금년 3월의 동일본 대지진은 이러한 TPP 참여에 부담스런 구조를 만들어 내었다. TPP 참여로 농·수·축산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산업이 주산업인 동북지역에 지진피해가 집중된 것은 TPP 참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증대시켰다. 더구나 동북지역 복구를 위해 많은 복구비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하여 TPP 참여 문제는 더욱 정치적 부담을 증대시켰다. 세금 인상과 TPP를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진 것이다.

2) 노다 내각의 외교정책과 TPP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다 수상은 이번 APEC 회의에서 TPP 교섭에 참가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왜 이런 어려운 결단을 내렸을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동일본 대지진으로 TPP 참여의 시대적 필요성도 높아진 게 사실이다. 대지진으로 일본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TPP 참가를 통해 일본의 국제경쟁력을 활용하고 일본경제를 재편하여 ‘일본 재생’의 원점으로 삼으려는 욕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노다 수상은 전통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대지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메이지 유신의 ‘선지자’들을 떠올리는 건 전통주의자 노다 수상에게 자연스런 일이었을 것이다. ‘헤이세이 유신’을 꿈꾸는 그에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야말로 ‘선지자적 사명의식’을 자극했을지도 모른다.

동시에 이러한 결단은 2010년 이후 일본외교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2010년은 중국이 일본을 누르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함으로써 국제질서에 있어 중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해였다. 특히 2010년의 중일 센카쿠 열도 분쟁, 천안함사건, 연평도포격사건은 아시아 질서에서 중국문제를 더욱 부각시켜, 일본 안보 혹은 외교에 있어 중국의 존재를 현실주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외교 전략은 하토야마 수상이 추진하던 ‘대등한 미일관계’ 정책에서 이탈하여 미일동맹을 공고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동일본 대지진에서 즉각적이고 효율적이었던 미국의 지원을 통해, 미일동맹의 전략적 의미가 국민 사이에 각인되었다는 점 또한 이러한 외교전략의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TPP 참가는 경제분야의 미일동맹 강화노선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노다 수상의 TPP 교섭에의 참여 표명은 2010년을 기점으로 하는 일본 외교전략의 전환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국의 적극적 FTA 전략이 일본정부의 초조함을 가속화시킨 측면도 존재한다. 올해 10월 한미 FTA 협정이 미 의회를 통과하자, 일본 언론은 ‘대충격’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위기의식을 감추지 못하였다. EU, 인도,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해 나가는 한국을 보며, 국제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갈 지 모른다는 의기의식이 팽배해진 것이다.

3) 미국의 간접적 압력과 TPP

2010년의 제 사건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불만을 확대시켜 적극적인 아시아 개입을 불러왔다. 미국은 천안함사건, 연평도포격사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중국에 시위하듯 한미 공동 군사훈련이라는 강도 높은 행동을 보였으며, 영토분쟁에 대한 기존의 중립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센카쿠 열도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해양 영토분쟁에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표명했다. 동시에 동중국해에서의 미일 군사훈련을 강화하였다.

경제면에서도 미국은 그 동안 참여를 유보하던 동아시아정상회담(EAS)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고, TPP에 일본의 가입을 촉구하며 APEC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마치 군사적, 경제적 양면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듯 한 외교 전략이 구사되고 있는 것이다.

TPP의 일본 참여를 독려하는 미국의 압력은 올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극명하게 표출되었다. 이전에 미국을 방문한 노다 수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한미FTA 기준을

추진하던 이명박 대통령을 환대하면서 일본정부에 무언의 압력을 구사한 것이다. 일본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역전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을 정도였다.

Ⅲ. 일본 국내정치 전망

1) 분점국회와 수상 리더십의 제약: TPP를 둘러싼 정치 역학관계

이렇듯 노다 수상은 다양한 이유로 ‘가장 힘든 시기’에 TPP 교섭에의 참여를 정식 표명했다. 하지만 가야할 길은 첩첩산중이다. 노다 수상이 표명한 것은 TPP 교섭에의 참여이지, TPP에의 참가가 아니다. TPP 적극론자 내에서도 교섭 여부에 따라, 일본에 불리하면 TPP에의 참가를 유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여당 내에서조차도 TPP 참가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이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신당은 TPP 참가 반대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세력이 상당히 존재한다.

더 큰 문제는 중의원(하원)은 여당, 참의원(상원)은 야당이 장악하는 분점국회(divided diet) 상황 하에서 수상의 리더십이 제약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8년의 분점국회 상황에서 자위대의 인도양 급유활동을 연장하기 위한 신(新)테러특별조치법이 참의원에서 장기간 심의되지 않아, 중의원에서 재가결 되기까지 법적 근거를 상실한 인도양 급유활동은 3개월간 정지된 적이 있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2/3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률안을 재가결하여 성립시켰지만, 현재의 민주당은 중의원 2/3 의석에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참의원에서도 부결된 법안을 재가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조약안은 중의원 결의를 우선하기 때문에 현재의 민주당 의석으로도 성립시킬 수 있으나, 야당이 분점국회를 이용해 다른 법안과 TPP 조약을 연계시키는 경우, 분점 국회에서 승인받을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인 자민당은 TPP 참가 문제를 정치쟁점화하여 민주당 정부를 붕괴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 TPP, 소비세, 그리고 정계개편

현재, 동일본 대지진 복구비용 마련을 위해 소비세 인상을 주장하는 노다 수상은 TPP와 소비세라는 ‘두 개의 폭탄’을 들고 있는 형국이다. 노다 수상은 올해 11월 21일, 소비세 인상 전에 그 신의를 국민에게 물겠다고 발표했다. 즉 소비세 인상이 결정되면 중의원을 해산하여 그 사안을 쟁점으로 국민의 신임을 물겠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 선거 역사상 소비세 인상이 쟁점이 되어 치러진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 경우가 없었다. 가장 최근에도 2010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간 수상이 소비세 인상을 거론하자 민주당은 대패했다.

만약 소비세 인상의 가부를 묻는 중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TPP 참여 또한 중요한 선거쟁점이 될 것이며 양자의 이슈가 결합되었을 때 정치적 반대집단이 다양화되어 민주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NHK 방송의 11월 여론조사를 보면, 소비세 인상 공약을 평가한다 45%, 평가하지 않는다 47%로 백중지세의 형국을 보이고 있다. 반면, TPP 참가 찬성 34%, 반대 21%로 TPP 참가가 우세다. 하지만 모르겠다가 38%로 정치쟁점화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소비세와 TPP 이슈가 결합되었을 때는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상황에서 중의원 선거가 치러질 경우, 민주당의 패배와 이에 따른 정계개편으로 치다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민주당과 자민당 내에는 소비세와 TPP를 둘러싼 내분이 존재하여,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정책사안에 따른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체적으로 소비세 인상을 찬성하는 그룹이 TPP 참가에도 찬성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계개편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또한 ‘파괴자(壊し屋)’의 별명을 얻을 만큼 정계개편의 달인인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의 재판 결과와 맞물리는 경우 정계개편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TPP 문제는 막다른 골목에 처한 일본경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제 3의 길’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일본은 대외개방을 통해 ‘일본 재생’의 길로 가느냐, 경제정책의 악순환구조에 빠져 저성장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정치가 이러한 막대한 사명을 다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느낌이다. 오히려 소비세와 TPP로 정계개편이라는 홍역을 앓은 후에야 ‘헤이세이 유신’의 정치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이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치적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2011/11/28)



※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이정철)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 또는 전화(02-733-3348)로 회원 등록하실 수 있으며,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과 아름다운 동행을 권합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신개입전략과 일본의 TPP전략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 I. TPP의 특징 -미국의 동아시아 신개입전략의 결정판
- II. 일본의 FTA정책 전환과 TPP 참여구상의 배경
- III. 일본의 TPP 참여 구상의 평가와 전망
- IV. 한미FTA, TPP 그리고 동아시아 통합의 미래

2011년 11월 11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참가를 하루 앞두고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자국 내에서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협상에의 참가의지를 에둘러 표명한다. 이는 또 다시 일본 내 TPP 반대기류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일본의 TPP 참가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된 것은 일본정부가 기존 FTA 정책기조로부터의 일대 전환이라 할 만한 새로운 FTA 정책을 각료회의에서 의결한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하에서는 TPP의 독특한 특성을 살펴보고 일본정부의 TPP 참여 구상의 배경을 짚어 본 뒤 이를 토대로 일본의 새 FTA 정책 및 TPP 참여구상의 향후 과제 등을 도출하기로 하자.

I. TPP의 특징 -미국의 동아시아 신개입전략의 결정판

TPP의 공식명칭은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계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으로써 그 첫 출발점은 싱가포르-뉴질랜드 FTA이다. 여기에 2006년 칠레와 브루나이도 합세하여 4개국 간에 TPP가 발효되었다. 이를 현재의 TPP와 구분하고자 ‘P4’로 통칭하기도 한다.

P4 회원국은 모두 소국 개방경제로서 세계 GDP와 무역에서 점하는 비중이 각기 0.8%, 2.2%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P4는 상품무역 분야에서 거의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였다.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인적 이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이며 서비스

무역은 비개방분야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취하였고 별도의 양해각서(MOU) 형태로 노동과 환경에 관한 조항도 포함시켰다. 단, 투자와 금융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P4의 독특함은 애초부터 APEC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추가 참여 자격을 부여하며 그를 위한 모델협정(template)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이는 EU의 확대방식을 제외하고는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점이다.

TPP는 P4의 확대판으로서 궁극적으로 APEC 회원국만의 환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를 지향한다. 2011년 11월 현재 P4에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5개국이 추가되어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를 P4와 구분하여 P9로 부르기도 한다. 기존의 P4에 비해 P9로 회원국이 늘어남에 따라 각국간 이해관계 대립이 심화되어 협상의 진척이 예상보다 더디다고 알려지고 있다.

2008년부터 미국은 TPP에 관심을 보이다가 2009년 12월 14일 론 커크 USTR 대사가 비로소 미 의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TPP 협상 참가의향을 밝힌다. 그 서한에는 그는 TPP가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인 아시아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환태평양 경제통합의 플랫폼이 되어야 하며 참가범위도 호주, 페루, 베트남이 추가되어야 추후 APEC 회원국의 참가 기반이 형성되며 나아가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 ASEAN 회원국 등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TPP 참여로 소기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기에는 P4와 같은 소규모 경제 위주의 확대로는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Bergsten and Schott(2010)도 USTR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TPP가 미국에 다음의 두 가지 이익을 제공하므로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TPP는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인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가능케 하며 특히 동 지역 내에 만연한 FTA 체결로 인한 미국 제품에 대한 차별을 만회시켜 준다고 강조한다. 둘째, 그간 일본, 한국 및 ASEAN이 미국에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는 균형자로서 아시아에 깊이 개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밝히며 미국은 TPP를 통해 아시아만의 경제통합을 막는 동시에 안보면에서 미국과 아시아를 잇는 제도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처럼 TPP는 한마디로 미국의 동아시아 신개입전략의 결정판이라 하겠다. 미국은 APEC의 한 축이자 세계경제의 견인차인 동아시아에서 자국이 배제된 채 FTA 체결이 가속화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TPP 참가를 결정한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의도를 Claude Barfield and Philip Levy(2009)는 미국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새판짜기(wholesale reconfiguration)’로 극명히 표현한다. 저자들은 싱가포르 전 총리 리관유(李光耀)의 발언을 인용, “미국이 아시아에 APEC과 여타 환태평양기구들을 통해 더 개입하지 않으면 중국

은 미국과 아시아국들의 국익을 해치는 지역 헤게모니로 냉혹하게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들은 TPP가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밑으로부터 실현하게 할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II. 일본의 FTA정책 전환과 TPP 참여구상의 배경

일본정부는 2004년 12월 FTA 정책을 「향후의 경제연계협정의 추진에 대한 기본방침」이란 제하에 공식화한 지 6년이 흐른 2010년 11월 9일 새로이 「포괄적 경제연계에 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란 FTA정책을 공표하였다.

「기본방침」은 신흥국 부상, 일본경제침체, DDA 전망 불투명, 주요국간 FTA 확대 등의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성장기반 재구축 필요성이 절박하다는 상황인식하에 민감품목을 배려하되,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며 동시에 국내개혁 선행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FTA 정책기조 제시를 골자로 한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정부는 앞으로의 FTA 과제로서, TPP 참가 여건 조성, 협상 중인 FTA 마무리, 한·일FTA 협상재개, EU와의 협의 가속화 등을 제시한다. 이것이 발표되자 단연 주목을 끌며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TPP 참가의지 표명이었다. 일본 정부는 TPP 참가의 목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개방을 통한 경제 활성화다. 일본에서 TPP 지지론자들은 TPP 참가가 단순한 무역 자유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는다. 저출산-고령화로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발발한 동일본대지진은 일본의 산업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이것이 산업공동화로 이어질까 일본정부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둘째, 일본정부는 높은 수준의 농업시장 개방이 요구되는 미국과의 양자간 FTA가 당분간 어렵다는 현실 인식하에, 한·미FTA 발효시 미국시장에서 불리해지는 일본기업의 경쟁열위를 TPP 참가로 만회하려고 한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는 한국의 FTA 체결속도에 가속도가 붙는 것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반영한다. 한·미FTA 발효시 한국에 대해 미국은 트럭(현행 25%), 베어링(현행 9%)의 관세를 10년 이내에 철폐하게 된다.

셋째, 일본은 TPP의 무역·투자 규범이 향후 이 지역의 실질적인 표준이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본도 TPP에 참가하여 일본에 유리한 규범을 제정하여 APEC 회원국 간의 경제통합체인 FTAAP 추진에 공헌하고 DDA에서의 규범 제정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한다. 일본은 TPP에 미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의 선진국이 포함되어 있어 TPP에

서 질 높은 무역규범의 제정이 가능하다는 고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방침」은 그러나 TPP 참가의 기회비용도 명시하고 있다. TPP는 10년 이내 전 품목 관세철폐를 원칙으로 하므로 일본이 TPP 참가시 지금까지 민감품목을 일괄 제외해 온 방식은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TPP 참가에 반대하는 농림수산성은 주요 19개 농산품의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경우 농산물 생산이 연간 4.1조 엔, GDP는 연간 1.6% 줄 것으로 추산한다. 농림수산성은 또한 일본이 TPP 협상에 참가한다면 특히 미국이 쇠고기 시장 개방과 비관세장벽 해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Ⅲ. 일본의 TPP 참여 구상의 평가와 전망

일본의 TPP 참여 구상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제시된 FTA정책이다. 그러나 이는 통상정책의 차원을 넘어, 외교안보적 지역전략적인 맥락이 강한 다목적용 포석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해 보자.

첫째, 대한관계에서 일본은 한미FTA 체결에 대해 TPP 체결로 미국시장에서의 경쟁열위를 만회하는 동시에 한국을 한·일FTA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는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 둘째, 대미관계에서는 후텐마기지 이전문제에 빠거덕거리는 일미관계를 복원하고 중국에 대응하여 일·미동맹을 강화하는데 TPP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대중관계에서는 중국의 역내통합 주도권을 견제할 의도로 시작한 한·일FTA가 지체되고, 이젠 한국이나 ASEAN 만으로는 중국견제에 역부족을 느끼자 미국과의 FTA라는 강공책을 마련한 것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대EU관계에서도 일·EUFTA에 소극적인 EU가 미국견제를 위해 일본과의 FTA 협상에 나서게 하며 협상 시 대EU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다목적용 포석이 실제 TPP 참가로 실현되기까지는 일본이 적잖은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일본이 개방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나서려면 자국 내 농업개혁이 불가피하나 우선 이것이 쉽지 않다. 일본의 기존 FTA의 상품 개방 수준(품목수 기준)은 84~88%이나 한국, 중국, EU 등이 TPP 참가국과 체결한 FTA의 양허수준은 모두 95%를 상회한다. 이 점에서 TPP보다 일·EUFTA나 한일FTA의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의 FTA 정책 비교>

	일본의 FTA 정책		한국의 FTA 정책 (2003년 「FTA 로드맵」)
	2004년 「기본방침」	2010년 「기본방침」	
목표	상호경제관계 강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높은 수준의 FTA 추진과 국내개혁 병행	선진통상국가 실현
주요 대상	동아시아 중시 (특히 ASEAN)	TPP, EU, 중국 등 거대·선진경제권 중시	미국, EU, 중국 등 거대·선진경제권 중시
포괄 범위	상품무역 위주 (선택적·탄력적)	TPP, 일-EU FTA는 포괄적 FTA	선진경제권과는 포괄적
개방 수준	제조업: 높음, 1차산업: 중간	전 산업에서 높은 수준	선진경제권과는 높은 수준

둘째, 흥미롭게도, 2010년의 「기본방침」 수립으로 한국과 일본의 FTA정책이 유사해졌다. 예컨대 기존 FTA 정책목표인 ‘상호경제관계 강화’가 2010년에는 ‘높은 수준의 FTA와 국내개혁’으로 전환되었고 FTA 체결대상도 동아시아 중시에서 거대선진경제권으로 바뀌었다. 포괄범위나 개방 수준도 포괄적·높은 수준으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세계3위의 내수시장 규모를 보유한 나라 일본이 높은 수출의존도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에 자극받아 한국과 유사한 FTA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고 바람직한 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셋째, 이렇듯 FTA 정책기조를 급선회한 결과 일본의 새 FTA 정책은 기존정책과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흐려졌다. 그간 동아시아공동체론을 설파하고 세계경제의 견인차라며 아시아와의 연계강화를 강조해 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TPP 참가구상에는 더 이상 아시아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선진국이 포함되어 있어 좋다는 반응은 다소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이러한 급선회의 배경에는 우선 기존 FTA 정책의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겠으나 중국 견제 필요성과 한국의 약진에 대한 조바심이라는 외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일본은 아시아 주변국에게 동아시아공동체론은 포기한 것인지, 주변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하고자 하는지 명쾌한 입장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일본이 TPP에서 자국에 유리한 무역규범 제정에 나서기까지 일본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일본이 협상에 참가하기 이전에 협상의 대체적인 윤곽이 잡혀 있는데 일본이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빨라야 1년 이내로 알려져 있다. 2011년 11월 12-13일간 미국에서 개최된 TPP 협상에 일본은 읍저버 자격의 참가도 불발된 것을 볼 때 일본 의도대로 될 지 예단하기 어렵다. 사실 최근 일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7%가 수상의 TPP 참가 표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상의 국내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지도력 및 대미 협상력 발휘 등에 대해 불안감을 지니고 있다는 응답이 56%에 달했다(산경·FNN世論調査, 2011. 11. 14).

IV. 한미FTA, TPP 그리고 동아시아 통합의 미래

한미FTA가 결국 국회에서 비준된 이즈음, 일견 무관해 보이는 한미FTA와 TPP의 관계를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는 것은 한미FTA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현재 TPP 협상은 총 24개 분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기존 P4 회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TPP의 템플릿으로 P4보다는 한미FTA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TPP에서는 P4와 달리 상품무역 협상분과가 농업, 공산품, 섬유의류 등으로 세분화되었고, 원산지 규정도 한미FTA에서처럼 섬유의류의 Yarn Forward 규정이 추가될 전망이다. 서비스 또한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로 나뉘었고, 노동과 환경이 추가되었다. 이렇듯 미국의 입김으로 TPP의 골격은 P4보다 한미FTA에 가까워지고 있다. 만일 최종적으로 TPP가 한미FTA와 유사하게 된다면 한국은 동아시아 통합시 자국이 체결한 FTA를 발판으로 삼게됨에 따라 의외의 어부지리를 얻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미국, EU, ASEAN 등 전세계 주요 경제권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한국은 FTA 유형의 백화점이 되었다. 단적으로 한국의 기체결 FTA의 원산지 규정에는 NAFTA형, 관유로형, 아세안형이 다 있다. FTA를 다수 체결함에 따라 실제 교역시 거래비용이 오히려 커지는 이른바 ‘스파게티볼 효과’가 발생할 우려조차 존재한다. 그로 인해 설령 TPP의 템플릿이 한미FTA가 되더라도 그다지 한국의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미국이 TPP의 템플릿으로 P4보다 한미FTA를 강조한다는 점은 미국에게 TPP와 한미FTA가 별개로 사고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신개입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상호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는 점을 방증한다. 즉 미국이 TPP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는 한미FTA와 거의 일치한다. 미국에게 한미FTA가 동아시아 통합에의 개입을 위한 출발역이었다면 TPP는 중간역쯤 되며 그 종착역은 FTAAP라 하겠다.

따라서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그 다음 수순으로 미국이 한국에 TPP로의 참가를 요청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여 TPP에 만일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과도하게 중국을 자극할 게 틀림없다. 이미 11월의 APEC 회의에서 중국은 미국 주도로 TPP의 판이 커지는 가운데 자극을 사실상 배제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하였다.

이제 중국은 미국에게 주도권을 빼가지 않기 위해 지금보다 더욱 집요하게 한국에 한중 FTA 체결을 요구하는 동시에 한중일FTA 체결도 서두를 것이다. 이런 중국을 바라보며 일본 또한 한일FTA 체결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은 내부적 준비도 갖추지 못한 채 FTA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며 나아가 TPP 논의뿐 아니라 동아시아 통합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동아시아 통합논의가 기존의 일·중 간 경쟁구도에서 자칫 미·중 간 경쟁구도로 전환되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더욱 급박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한편으로 한국의 한미FTA 체결에 의해, 다른 한편 일본의 TPP 참가로 인해 가속화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여하에 따라 기존의 동아시아 통합논의는 사실상 형해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동아시아의 FTA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되므로 반겨야 할 것인가. 그 한 복판에 한국이 있으니 이제 우리는 FTA의 허브가 되었다고 쌍수 들고 환영해야 할 일인가. 그렇지 않다. 동아시아 구성원의 자발성과 신뢰에 기초한 통합이 아니라, 외적 요인에 촉발되어 상호 불신과 견제에 기초해 완력으로 밀고 당기는 경제통합은 첫 출발부터 위태로우며 지속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한미FTA를 시발점으로 준비되지 않은 개방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동아시아의 경제통합도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표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국은 지금 그 어느 나라보다도 동아시아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결단의 시기에 놓여있는 듯하다. (2011/11/30)



※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이정철)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 또는 전화(02-733-3348)로 회원 등록하실 수 있으며,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과 아름다운 동행을 권합니다.

KNSI 특별기획 제36-3호

미중 카르텔과 중국의 반TPP 정치학: “미국만큼 우리에게도!”

박홍서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연구교수)

- I. 문제 제기
- II. ‘자기 예언적’ 미중갈등
- III. 미중갈등은 국내정치용?

I. 문제 제기

최근 미중갈등에 관한 보도는 ‘유행’이 되고 있다. 미국의 소위 ‘아시아로의 회귀’와 이를 자국에 대한 견제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반발이 맞물리면서 미중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11월 연이어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미중 양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에서부터 남중국해 분쟁까지 경제, 안보를 망라해 긴장관계를 연출하고 있기도 하다.

TPP를 둘러싼 미중갈등은 실재인가? 아니면 허구인가? 그것이 실재라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어떠한 사회현상이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 성격과 수면 밑의 실제적 영역을 동시에 포함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TPP를 이용해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는 주장은 피상적 현상에 대한 과도한 호들갑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미중관계는 탈냉전기 전체를 놓고 볼 때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중갈등 필연론의 기원은 무엇인가?

II. ‘자기 예언적’ 미중갈등

향후 미중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상반된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로 미중간 협력적 관계가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론과 부상하는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

서에 필연적으로 도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부정론이 그것이다. 특히, 현실주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미국 내의 주류 시각은 미중간 갈등 심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지구적 학문적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기도 하다.

국제정치 현상을 뉴턴 역학의 결정론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현실주의의 요지는 간단하다. 국가간 힘의 변화는 국제정치 분석의 알파요 오메가다. 따라서 신흥강대국 중국과 슈퍼파워 미국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운명이다. 당연히 미국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 대중국 견제를 위한 안정적 군사력 유지와 동맹관계를 활용한 대중국 포위전략이 그 정책적 처방으로 제시된다.

무정부 상태인 국제정치에서 힘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역사학자 카(E.H.Carr)가 비판하듯 국가간 세력관계를 무시하는 순진한 이상주의가 히틀러라는 괴물을 잉태시켰다. 그러나 그렇다고 국가간 세력관계를 ‘기계적’으로 이용하려는 것까지 옹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이미 현실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로 포장된 또 다른 관념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중갈등 필연론은 이러한 기계적 현실주의에 기반한다.

“전쟁은 외교의 연속”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유명한 경구는 핵역지력을 보유한 미국과 중국관계에서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 사소한 무력충돌이라도 ‘공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냉전기 미소 양국이 일상적인 갈등 속에서도 직접적 충돌은 극도로 자제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그리고 미래의 미중간 갈등이 본질적으로 외교적 수준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물론, 여느 강대국간 관계처럼 미중관계 역시 완전한 협력은 불가능하다. 이렇다면 결국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카르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공멸 금지라는 대전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이 카르텔이다. 사실 과거 미소 냉전체제는 은폐된 형태의 카르텔이기도 하였다. 1945년 2월 개최된 얄타회담의 본질은 전후 국제정치에 대한 지분 나누기였다. 2005년 9월 부시정권이 미중관계를 ‘이익 상관자(stake holder)’로 규정한 것은 카르텔 구축에 대한 적극적 의지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미소 얄타체제의 미중 버전인 것이다.

핵무기시대의 도래가 자동적으로 미중 담합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한 사고 역시 기계적이다. 냉전기 내내 핵보유국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갈등적이었던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심지어 중국과 소련은 1969년 핵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는 무력충돌까지 불사하였다. 결국 미중관계가 카르텔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 중소관계와 상이한 또 다른 구조적 요인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구분된 각자의 세력권이 그것이다.

동물세계 싸움의 거의 대부분은 텃세싸움에서 비롯된다. 그만큼 텃세가 겹칠수록 싸움의 횟수와 강도는 증가한다. 침팬지와 99%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인간사회라고 무엇이 다르겠는가? 결국 국가간 세력권이 중첩될수록 국가간 경쟁관계는 심화되고 그 반대일 경우 국가간 공생 가능성은 증가한다. 그 공생관계가 바로 카르텔이다.

1,2차 세계대전이 강대국의 세력권이 겹칠 수밖에 없었던 유럽에서 발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중소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반면, 세력권이 비교적 분리된 미국과 소련은 알타체제를 반세기동안이나 지속시켰다. ‘전국책’에 나오는 ‘먼 나라와 화친해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라(遠交近攻)’의 논리는 바로 이러한 상식에서 도출된 정책적 충고이기도 하다. 향후 미중갈등보다는 오히려 중러갈등, 중일갈등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보다 높을 수 있는 것이다.

미중갈등 필연론을 외치는 기계적 현실주의는 이러한 상황을 무시한다. 핵무기 시대이든 미중간 세력권이냐 어떻든 중국의 성장은 자동적으로 미중 양국의 충돌로 이어진다. 중력은 ‘즉각적’으로 전달된다고 가정했던 뉴턴의 가설적 주장을 그대로 국제정치에 옮겨 놓은 것이다. 그러나 태양의 폭발이 몇 분의 시차를 두고 ‘복잡한’ 경로를 통해 지구에 영향을 주듯이, 국가간 세력변화도 유사한 방식으로 국제관계에 영향을 준다. 기계적 현실주의자는 그러한 복잡한 경로를 외면한다.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Ⅲ. 미중갈등은 국내정치용?

미중갈등 가능성은 물론 얼마든지 상존한다. 동일한 이유로 미중 양국 중 일방이 핵억지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선취한다면 공멸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전쟁을 불사할 수도 있다. 미국의 MD체제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대만이나 한반도와 같이 중국이 자국의 핵심 세력권이라 여기는 지역에서 미국이 매우 ‘도발적’으로 자리 뺏기 싸움을 건다면 미중 카르텔은 근본적으로 붕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이지 않는다.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미중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전제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든지, 천수이볜 정권시기 보다 마잉지우 정권시기의 안정적 양안관계에 오바마 정권이 크게 안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채 TPP를 추진한다거나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려는 최근 일련의 행동들은 무엇인가? 당연히 대다수의 주장처럼 중국 견제용이라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결별이 불가능해진 미중간 경제적 상호의존과 남중국해 문제가 자칫 양국간 군사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공세적 행태가 중국견제를 넘어서는 또 다른 그 무엇을 노리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어찌 보면 중국견제는 그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결국 미국의 공세적 동아시아 전략은 ‘국내용’ 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경제위기 극복에 어떠한 형태로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이 필요하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탄탄한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아시아는 구미를 당길 수밖에 없는 타깃이다. 아울러 중국견제의 뉘앙스를 풍김으로써 ‘유약한’ 대중정책을 비판하는 미국 내 보수파들의 목소리도 잠재울 수 있다.

중국도 딱히 손해 볼 것은 없다. 내년 지도부교체를 앞두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미국과의 적절한 긴장관계는 공산당에 대한 인민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자산이 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특유의 ‘관리된’ 민족주의를 통해 체제안정을 도모해 왔다는 사실에서 더욱 그렇다. 당기관지 인민일보에 비해 환구시보와 같은 대중적 신문이 보다 선정적인 형태로 미중간 긴장관계를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TPP에 크게 우려하는 눈치도 아니다. 관영언론들은 대놓고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과연 그들만의 환태평양 경제협력체를 설립할 수 있겠는가라는 조소를 보낸다. APEC 회담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미국의 공세적 TPP 추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은 사실 이러한 냉소적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중 경제관계는 동일한 식민지를 두고 다투는 제국주의간 경쟁이 아니라, 미국은 중국의 흘러넘치는 돈을, 중국은 거대한 미국시장을 필요로 하는 기묘한 공생관계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의도된 갈등은 대외적으로 ‘지역구’ 관리라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미국은 실제로 남중국해 문제를 통해 필리핀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든지, 중국위협론을 심리적으로 이용해 결과적으로 한미FTA와 일본의 TPP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중국 역시 ASEAN과의 FTA를 강화하고 한중일 FTA의 체결에 강력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일견 중국이 수세에 몰린 것으로 풀이 될 수 있지만, "미국만큼 우리에게도!"라는 훌륭한 협상카드를 쥐게 된 것이다. 19세기말 열강들은 바로 이러한 논리를 통해 조선에 일련의 불평등조약을 강권하였다.

언제나 이상과 현실은 공존한다. 순진한 이상주의나 기계적 현실주의는 모두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내용의 차이를 떠나 모두 세상을 자기 예언적으로 재단한다. 탈냉전기 20년 동안 기계적 현실주의는 미중갈등 필연론을 확산시켜 왔다. 그러한 상황에서 실질적 이득을 챙기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11월 19일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오바마-원자바오는 예정에도 없던 양자회담을 가졌다. 그 전격적 회담에서도 APEC과 동아시아 정상회담 내내 벌였던 설전을 이어갔을까? 아니면 “선수끼리 왜 그래? 다 알면서..” 라는 ‘깊은’ 우의를 나눴을까? 미중갈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세한 사실관계가 아니라 때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전체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미중 사이에 위치한 약소국 한국이 필히 유의해야 할 문제이다.(2011/12/2)



※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이정철)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 또는 전화(02-733-3348)로 회원 등록하실 수 있으며,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과 아름다운 동행을 권합니다.